

5년 방치 사유지 녹장 용도폐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허술’

산정로 옛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2022년 ‘가족센터’ 통합후 장기 방치
관리 비용 누수·활용 의지 부족 비판
市 “효율적인 관리 방안 조속히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산하 복지 기관 통합으로 사용이 중단된 시 소유 행정재산을 5년여간 빈 건물로 방치하다 뒤늦게 용도폐지 절차에 나서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산정로 150번길 일

원에 위치한 옛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의 행정재산 용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공유재산 총괄 관리 부서로 이관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건물은 1995년 신축된 지상 3층 연면적 563.07㎡ 규모 사유지다. 과거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사용했으나 유관 기관과의 기능 통합이 이뤄진 뒤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빈 건물로 남겨졌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통합서비스 기관 명칭을 ‘가족센터’로 일원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개별 운영되던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맞춰 목포시 역시 2022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목포시 가족센터’로 공식 통합하고 동명동 목포건어물것갈센터로 이전했다.
가족센터는 총 1천411㎡ 규모 공간에 교육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추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상근 종사자 32명과 비상근 인력 146명이 투입돼 위기가족 사례 관리,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1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논란의 핵심은 기관 통합으로 공간이 비워진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산정로 기존 건물이 방

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을 무의미하게 유지하며 발생한 관리 비용 누수는 물론, 행정재산 활용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목포시는 건물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30년 가까이 된 시설 노후화와 좁은 공간 구성으로 인해 적정 사업을 찾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행정재산 목적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용도폐지를 결정했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별다른 활용 없이 유지해온 데 대해 공유재산 관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 재산을 수년간 빈 건물로 둔 채 이제야 부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며 “개인 사유재산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 부서 이관을 넘어 건물이 장기 방치된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활용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이관 이후 건물 입지 여건을 재검토해 매각이나 대부, 공공목적 활용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내년 신설…月 최대 70만원

정부 아동수당 30만원+군비 40만원 추가
김태성 군수 “두터운 지원…저출생 극복”

신안군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아동양육수당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사전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아동양육수당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안군 아동양육수당은 정부 아동수당(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날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분유와 기저귀, 학습도구, 교육비 등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군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줘 타 시·군보다 더 두터운 지원 속에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홍 기자

영암군, 군민 체감형 정책 도입 속도
2027년 업무보고회 374건 실행방안 점검
안전·관광 등 전 분야 데이터 기반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핵심 사업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군민 체감형 정책을 도입하는 등 2027년 군정 청사진을 확정했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에서는 공약 사업 91건, 전남광주특별시정 연계 사업 19건, 신규 시책 77건, 역점 사업 187건 등 총 374건을 논의했다. 각 사업 실행 가능성과 부서 간 연계 방안을 점검해 군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관광 부문은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를 앞두고 구림마을 중심 체류형 코스 개발과 상권



소비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다. 복지·인구 부문은 귀농귀촌 정착 수요를 파악하고 다문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부문의 경우 침수·산불 등 반복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 중심 대응망을 마련한다. 농업·경제 부문은 주요 농축산물 유통 과정을 개선해 소득을 높이고 행정 부문은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판단 정확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단순한 계획 추진을 넘어 군민 삶에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사업 간 유기적 연결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관계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민·관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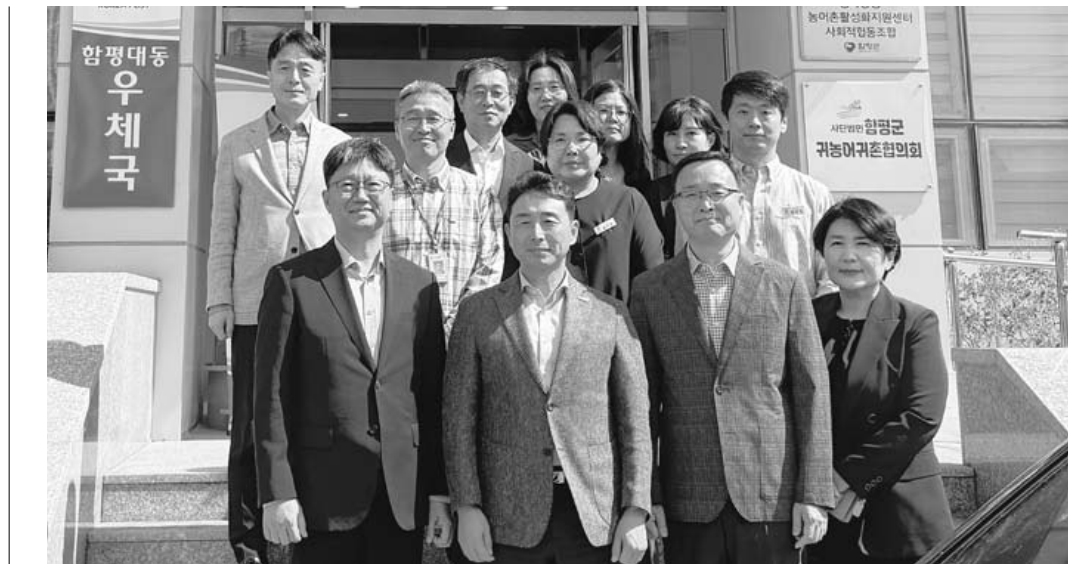
강진군,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

민·관 TF 회의 부서 간 협업 강화
주민 홍보·현장 중심 대응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7일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민·관 TF 실무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지역

경제·농정 등 핵심 관계 부서장과 읍·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주요 내용과 방향을 공유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읍·면 단위 밀착 주민 홍보 체계 구축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군은 지난달 예산·지역경제 부서 협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읍·면과 연계한 상시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해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부서와 읍·면이 긴밀히 소통해 시범사업 선정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함평군, 전남광주 최초 지자체-우체국 ‘공간통합’

대동면 행복배움광장에 우체국 이전
행정·우편·금융서비스 원스톱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이 전남 광주 최초로 지자체와 우체국 공간을 통합해 주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함평군은 7일 “함평대동우체국이 전남 대동면 행복배움광장으로 이전에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함평군은 공간통합을 위해 대동면 행복배움광장 내 일부 공간을 우체국에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의 공간

사용 기간은 2031년 6월까지다.
공간통합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우체국이 협업한 전남광주 지역 최초 사례로 공공시설을 활용,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공간통합이 주민들의 기관 방문 부담을 줄여 공공서비스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행정기관 간 경계를 넘어 주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며 “공공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나주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 5% 추가 캐시백

12월20일까지 32개 업소 적립 혜택
가게 부담↓ 지역내 소비 활성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7일 “오는 12월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32개소)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위생,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사업 기간 동안 착한가격업소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나주=정종환 기자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 사용을 착한가격업소와 연계, 시민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나주시는 착한가격업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5%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 가게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개인 맞춤형 ‘해남관광택시’ 시범 운행

郡, 2대 투입…이용 3일 전 예약 필수
3시간 기준 6만원 관광객 50%만 부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7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개인 맞춤형 이동 서비스인 ‘해남관광택시’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관광택시 2대가 투입돼 해남 전역을 누빈다. 이용 요금은 3시간 6만원, 5시간 10만원, 8시간 15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광객은 전체 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운행 시간에는 관광지 관람과 식사, 대기 시간

이 모두 포함된다.
이용 대상은 해남군 외 타 지역 거주 관광객으로 한정된다. 탑승 시 10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탑승 희망자는 이용 3일 전까지 해남개인택시지부 콜센터(061-536-3883)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해 정식 운영·확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광택시 도입으로 타 지역 방문객들이 해남 명소를 제약없이 쾌적하게 둘러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